

## ‘고향사랑 지정기부’ 지자체 특색사업 발굴 나서야

### 기부 활성화 위해 지난달 도입 특정사업 직접 기부... 실적 저조 행안부 개입에 자율성 보장 안돼 도 “프로젝트 발굴·컨설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가 특색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등록된 전국 지자체 지정기부 사업은 광주와 경남 각 4건, 충남 2건, 전남과 울산, 서울 각각 1건 등 총 13건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첫 시행된 지정기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자신이 낸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자들의 ‘기부 효능감’을 높임과 동시에 별다른 답례품이 없는 지자체 또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 발굴을 통해 모금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기부는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에서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된 영암군의 ‘맘(mom)안심 프로젝트’에는 71명의 기부자가 71만 4200원을 기부했다. 이는 총 목표금액인 5000만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암군을 제외하면 전남에서 시행 중인 지정기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약 143억3000만원을 모으는데 성공하며 기록한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정기부 특성상 대형 사업이 불가능한데다 기부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모금 수치가 저조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사업 발굴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정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정기부에 앞서 행안부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정해진 양식에 맞춰 가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각 사업이나 지자체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대 글로벌대학 선정 지산학병연 협약식 강기정 광주시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9일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위한 지산학병연 협약체결을 한 뒤 참석자들과 글로벌대학30 선정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양배 기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다양한 답례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납세를 제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공적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각 지자체가 본연의 특색

을 잘 살릴 수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진단했다.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소규모의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국비 사업 등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안부의 과도한 규제

와 제한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담아낸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지정기부 사업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토론했다.

▶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민주, ‘윤 탄핵 청원’ 청문회

### 취임 후 15번째 “정치적 의도” 민주,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중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제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며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라고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9일인 채상병 1주기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